

## 2023년도 우수공무원 후보자 공개검증 안내

2023년도 우수공무원 후보자의 주요 공적을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포상 후보자에 대해 붙임과 같이 주요 공적을 공개하오니, 공개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 인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개기간 : '23.11.06.(월) ~ '23.11.21(화) (15일간)
2. 공개목적 : 2023년도 우수공무원 후보자의 추천제한 해당여부 검토

3. 후 보 자 : [붙임1] 참조

4. 의견제출 : 전자우편(wndrud1227@korea.kr) / 팩스(044-200-2809)

※ [붙임2]에 따라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 별도의 회신은 하지 않으며 공적심사 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5. 문의사항 :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 인사과 김종경 주무관(044-200-2806)

## 2023년도 우수공무원 후보자 명단

(성명 가나다 순)

연번	소속	성명	주요 공적
1	국무조정실	강주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정부 ODA 추진방향 마련 및 '23년도 예산안 대폭 증액 등을 통해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국정과제 99-4)을 위한 기반마련('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계사업의 패키지화·대형화·브랜드화를 통한 활성화 및 ODA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및 추진방식 선진화</li> <li>- '23년도 ODA 예산안 전년 대비 12.5%(5,000억원)로 대폭 증액</li> </ul> </li> <li>■ 사회분야 중장기 정책방향·전략수립 및 현안 점검·관리('19.10~'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25회) 및 부처간 이견 선제적 조정,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지원 방안' 등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대비</li> <li>- 특히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기본계획' 수립('21.1) 등을 통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국정과제 49)에 공헌</li> </ul> </li> </ul>
2	국무총리 비서실	김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정협력 및 당정협의 운영시스템 구축 및 고위당정협의회 정례화('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민생안건과 정책결정 사항에 대해 당정 최고위급에서 논의토록 준비하여 당정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li> <li>* 수해대책, 추석 민생대책, 스토킹대책, 보이스피싱대책, 정부조직개편 방안,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소상공인재난지원금 상환 면제 등 발표</li> </ul> </li> <li>■ 정부 입법관리 총괄 및 신속한 국정과제 법안 통과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정입법지원협의회를 구성, 국정과제법안, 당정주력법안 선정, 국회 통과 협력 시스템 구축, 실무급 당정입법지원협의회 8회, 고위 당정입법지원협의회 1회 개최('23.11)</li> </ul> </li> <li>■ 국회 대정부질문, 상임위, 예결위 개최시 정부입장 정리 및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 임시국회, 정기국회 시 주요 정무 쟁점에 대한 검토, 분석을 통해 정부의 주요 입장을 정리하여 국무총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보좌</li> </ul> </li> </ul>
3	국무조정실	김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중심의 선제적 재난안전 사고 대응('23)</li> <li>■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행정 역량 강화('2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연구 인건비 인센티브 강화 △출연연 제한경쟁체용 사전협의 시스템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여 출연연의 국정기여도 제고</li> </ul> </li> <li>■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 및 국정철학 정립에 기여('22)</li> <li>■ 부산저축은행 피해자(3.8만명)의 피해구제 계기 마련('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저축은행에서 2,369원을 대출하고 상환하지 않은 채 체류중인 자의 국내송환을 위해 국조실-금융위-대검찰청 등 TF구성,</li> <li>- 대한민국-캄보디아 유관부처 간 고위급 협의를 추진, 체류자의 국내 송환 성과를 창출, 국민들의 피해회복 지원</li> </ul> </li> </ul>

연번	소속	성명	주요 공적
4	국무조정실	김성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분석과제 추진을 통한 다부처 현안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관련 국정과제(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이행 도모('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 마련('23.7)</li> <li>-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여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li> </ul> </li> <li>■ 국정과제 대상 수시점검을 통해 신속한 국정과제 성과 창출 독려('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기별로 이행이 지연되거나 국민만족도가 낮은 국정과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한계와 보완할 점을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즉각적인 시정 조치</li> </ul> </li> <li>■ 국정과제 이견법안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안 중 관계부처간 이견이 있어 계류 중인 법안 7건에 대하여 조정을 추진, 이 중 6건에 대하여 이견을 해소</li> </ul> </li> </ul>
5	국무조정실	김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총리의 내각통할 및 국정운영과 정책조정을 밀착하여 보좌('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례회등을 통해 주요정책 및 현안 등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큰 틀의 국정방향을 설정하실 수 있도록 보좌</li> <li>- △무탄소에너지이니셔티브(CFE) 추진계획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점검 및 방향설정</li> </ul> </li> <li>■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조실 주도로 검찰청, 경찰청, 과기정통부, 금융위, 방통위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범정부대책 T/F」를 적극적으로 운영,</li> <li>- △대포폰 개통방지를 위한 개통회선수 제한 △긴급 예금지급정지제도 도입 △오픈뱅킹 제한 등 「보이스피싱 통신 금융대책」을 마련, 발표</li> </ul> </li> </ul>
6	국무총리 비서실	박효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정책·이슈 사안에 대해 현장 소통 실시, 국무총리의 국정운영 보좌('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사각지대, 부처간 엇박자 우려 과제, 민생현안 등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정책 수요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 제언을 수렴</li> <li>- 다수 국민 관련 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민원을 상시 발굴하여 정책개선으로 연계되도록 조치함으로써, 민원 만족도 제고 및 사회적 갈등의 선제적 해결을 지원</li> <li>- 국무총리 현장 행보시 건의사항에 대한 이행관리 및 주기적 점검을 통해 민생과 현장을 중시하는 총리 위상 정립에 기여</li> </ul> </li> <li>■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국민정신건강센터 건립, 공동체복합시설 건립 등 주요 추모사업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현안사항을 적기 대응</li> </ul>

연번	소속	성명	주요 공적
7	국무조정실	손동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체계 안착 지원 및 성과창출 본격화 지원(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성공적 개최, 대형마트 영업제한, 미혼부 아동출생신고 개선 등 규제심판제도 운영을 통한 新제도 안착 지원</li> <li>- 범부처 규제혁신과제 1,000여건 발굴하여 275건(22.9월 기준) 개선완료, 161건의 규제개혁신문고 국민건의를 개선하는 등 규제혁신 성과 창출</li> </ul> </li> <li>■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관련 기반 마련에 기여(21.6~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특별대책 마련(21.8), 주요 부처에 청년정책 전담조직 설치(21.9), 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정례화(월 1회) 등 청년정책 추진 기여</li> </ul> </li> <li>■ 체계적·통합적·효율적인 공적개발원조(ODA)를 위한 기반 마련(20.5~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20.11~) 및 국제개발협력본부 신설(21.2)하고, 제3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1~25), 자원배분계획 수립 등을 통해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우리나라 ODA 경쟁력 제고에 기여</li> </ul> </li> </ul>
8	국무조정실	양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금개혁 등 복지업무 총괄(2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리주재 장애인정책추진, 아동정책추진 개최, 복지위기가구 발굴 강화 방안 마련 및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 지원·엘리엇/메이슨 ISDS 관계부처 합동 대응</li> </ul> </li> <li>■ 교통·물류 분야, 김해신공항검증 관련 정책현안 점검·조정 지원(2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항행계획·국가물류기본계획 등 주요 계획 수립 지원 및 철도망 구축 계획 관련 지역갈등 조정 지원, 택배 등 관련 생활물류법령 제정 등 지원</li> <li>-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 운영 지원, 국토부 등 관계부처 자료요청 및 ICAO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 등을 통해 검증위 검증결과 발표 및 후속조치 추진</li> </ul> </li> <li>■ SNS 운영 등을 통해 국무총리·국무조정실 홍보 추진(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NS 관리·운영, 카드뉴스·정책영상 제작·배포 등 쌍방향 소통체계 강화, 총리실 홈페이지 메뉴·디자인 대폭 개편 등을 통해 성공적 홍보에 기여</li> </ul> </li> </ul>
9	국무조정실	유희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식품부·국토부·해수부 주요업무를 담당,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운영 보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방역상황 점검 및 대책회의(13회), 국무총리 긴급지시(8회), 국무총리 현장점검(2회)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발생 피해 최소화</li> <li>-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렘피스킨병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초동 대응을 담당하여 안정적으로 관리중, 농식품부와 신속한 백신 도입 및 방역을 위해 긴밀한 협의 추진</li> <li>- 서울 화곡동 빌라왕,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등으로 심각해진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현안관계장관회의 등 대책(4건) 마련을 지원하는 등 총력 대응</li> </ul> </li> <li>■ 현 정부 출범에 맞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거버넌스로서 중장기 국가 비전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li> </ul>

연번	소속	성명	주요 공적
10	국무총리 비서실	이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면·방송·온라인 여론분석을 제공, 정책 고도화와 신속한 언론대응을 지원하고 페이스북(정부내 3위), 유튜브 운영을 통해 정책홍보 제고(23)</li> <li>- 국무총리 개인 페이스북 운영관리를 통해 각종 행사/회의 등의 이면을 소개하여 국민들의 정책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li> <li>- 규제홍보영상, 교육 카드뉴스, 청년정책 영상 등 국조실, 비서실내 타 부서의 정책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li> <li>- 빅데이터 분석과 정성분석을 체계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심층분석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세대별 여론 주도층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주이 변화를 연구하여 정책 리스크 최소화, 마케팅을 효과 향상</li> <li>■ 탄소중립위원회 및 사무처의 신속한 출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차질없이 수립 완료</li> <li>-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이행점검을 위한 지침과 시행령을 마련하여 탄소중립 실행체제가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li> </ul>
11	국무조정실	이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중립 녹색성장 주요정책 수립 및 관리</li> <li>-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42)」 최초 수립(23.4월)</li> <li>- '21년 NDC 감축목표('18년 比 40%감축)는 준수하면서, 업계여건 및 기술개발 상황 등을 고려해 부문별 목표 일부 조정(23.4월)</li> <li>■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신산업·신기술 사업화 지원</li> <li>- 6개 분야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통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니브 등 총 759건의 과제 승인(22.10월 기준), 실증특례 제도 내실화 등 추진</li> <li>-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규제샌드박스제도 개선방안(규제샌드박스 플러스) 마련하여 국정과제에 포함, 관련 행정규제기준법 개정안 마련·입법 추진</li> <li>■ 부처이견 및 갈등조정, 관련 행사 등을 통한 규제혁신 추진 지원</li> <li>-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 과정에서 갈등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실무 조정회의 및 규제샌드박스 TF(5회)회의 안건 작성 등 갈등조정에 기여</li> <li>- 총리 기업현장 및 경제단체 방문 등 준비 및 후속조치(60개 건의과제) 검토</li> </ul>
12	국무조정실	장영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의료, 사회복지, 저출생·고령화 분야의 각종 현안 및 정책조정(22~)</li> <li>- 현 정부 저출산정책 기초(5대 핵심분야) 발표(23.3월, 저고위), 제6차(23~27)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3.3월) 및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 방안(23.4월) 마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5월) 최초 수립 등 저고위·복지부의 사회분야 주요 정책 수립 지원</li> <li>-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리실 상황실 총괄 반장으로 일상회복 지원, 백신접종 및 치료제 도입 등 주요 방역정책 총괄</li> <li>■ 부조리 취약 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 정부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된 공직자 복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통해 공직사회 기강확립(21.6~22.8)</li> <li>■ ODA 종합전략 수립, 양자·다자 협력사업간 연계 강화(19.2~20.5)</li> <li>- 국제개발협력본부 출범 前 국별·지역별 지원전략의 수립·지원 등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효율성 제고와 통합·조정기능 강화</li> </ul>

연번	소속	성명	주요 공적
13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황정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속·공정한 사건처리를 도모하여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조기에 구제하고 현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인 '공정과 상식'을 조세 분야에서도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판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처리절차 간소화,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등 14개 추진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발표·시행('23.4)</li> <li>- '23년 역대 최다 접수건수(10월 현재 15,289건)를 기록하는 가운데 처리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2%이상 증가('22년 9,521건→'23년 13,484건)하였고 평균처리일수를 71일('22년 234일→'23년 11월 현재 163일) 단축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조기에 구제</li> </ul> </li> <li>■ 조세불복기관 정책협의회 신설·운영하여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판·심사청구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감사원·국세청 3개 조세불복기관간 결정의 통일성을 확립,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공유하기 위한 조세불복기관 정책협의회 최초 개최, 정례화</li> </ul> </li> </ul>

포상후보자에 대한 의견제출 양식

의견제출인	성명		연락처	
	주소			
대상후보자	소속기관		성명	
주요내용				